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코로나19 대책 마련 요구

총인건비 별도 인정, 경영평가 유예 등 조치 요구

연맹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 총인건비 별도 인정, 경영평가 유예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연맹은 공대위 소속 3개 산별(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과 함께 공운위에 전달할 코로나19 관련 주요 요구안을 마련하고 30일 개최되는 회의에서 전달할 계획이다.

연맹과 3개 산별의 주요 요구안은 ▲총인건비 별도 인정 및 예산, 인력 추가 투입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 보전 ▲경영평가 목표치 조정 또는 1년 유예 ▲교육 강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 ▲콜센터 등 집단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특별 조치 등이다.

특히 연맹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 기관 모두 경영평가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2021년 경영평가 목표치 대폭 수정이나, 경영평가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보건관리 전문인력 충원 ▲대민부서 안전보건 물품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수혜 확대 및 조기 집행 ▲코로나19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총인건비 별도 인정을 요구하며, “모든 조치에서 노동자간 차별 없이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 공공기관위원회 대응 및 노정협의 의제 논의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26~27일 경기도 양평에서 집행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공공기관위원회 대응과 노정 협의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공대위는 공공기관위원회 대응을 위해 각 의제별 쟁점을 정리하고 개별 추진단계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의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노정협의 의제 및 임금제도 개편 등 주요 안건과 코로나19 관련 노동계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한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노총, 노동존중 후보 당선 위해 나선다

노동분야 대책기구 마련 및 업종별 위원회 구성



한국노총이 ‘제21대 총선 미래선대위 노동존중 실천단’ 출범과 함께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 후보 66명을 선정해 공식 지지를 선언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노동존중실천단 출정식을 열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66명의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은 평소 노동가치 존중과 활동 경력을 고려해 선정됐다.

한국노총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노동존중 후보를 선정하고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제조·금융·공공·서비스·운수의 총 5개의 업종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들과의 협업과 업종별 현안에 대한 적극적 활동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공공부문은 황병관 연맹 위원장과 박광온 후보가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출정식에 앞서 25일에는 공공연맹 회원

조합 대표자들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이 간담회를 갖고 총선 및 코로나19 대응 등 의견을 나눴다.

공공부문 노사, 코로나19 극복 위한 나눔 나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나눔 활동에 공공부문 노사가 적극 나서고 있다.

연맹은 지난달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최일선에서 감염병에 맞서고 있는 공공노동자들을 위한 연대 활동에 나섰다.

대구의료원노조, 대구서부노인전문병원노조 등 대구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연맹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모금 활동을 벌여 연맹 회원조합의 참여와 함께 후원금이 대구지역본부에 전달됐다.

한국노총도 지난달 26에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 2만개를 기부했고, 16일에는 모금활동을 통해 모인 성금 1억 원을 대구·경북 지역에 전달했다.

한국노총과 공공연맹 등 노동조합 상급단체와 많은 공공기관에서 노조와 임직원이 함께 모금 활동에 나서며 대구·경북 지역을 위한 연대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8일 국가보훈처노조(위원장 한진미)도 재가복지서비스(취약계층 등 어려운 환경에 놓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훈복지 서비스)가 사실상 마비된 대구·경북 지역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아 대구보훈지방청사에 전달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노조(위원장 이태형)도 사측과 함께 25일 성금을 모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전달하는 등 공공부문 노사 모두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임금체불로 회사와 대표이사 고소

사측의 임의단체 협회비 일괄 공제는 불법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위원장 최원석, 이하 노조)가 (주)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과 대표이사를 임금체불로 고소했다. 노조는 19일 서울 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고소장을 냈다.

노조는 회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단체(한마음협의회)의 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가 회사에 임의 공제 중단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노조는 그동안 불법으로 공제된 임금이 체불임금에 해당한다며 고소에 나서게 된 것이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은 통화

(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에 따라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는 한마음협의회 회칙으로 임금을 공제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회사가 노동조합비와 한마음협의회 회비를 이중 공제해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회사와 지난 2월 5일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단체협약에 따라 2월 21일부터 조합비가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노사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



도로교통공단노사(노조위원장 이종상)가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하 재단)에 약 6억 5천만 원의 기금을 출연했다.

지난 18일 오전 노사는 재단 회의실에서 출연식 행사를 열고 재단에 기금을 전달했다. 이번 출연금은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지급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노사가 반납해 마련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2017년 6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이후 성과급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연맹(회원조합) 주요일정

- 3월 31일(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및 중앙정치위원회
(14:00, 한국노총회관 6층 회의실)

- 4월 2일(목)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 6차 회의
(15:00, 경사노위 회의실)